

한동훈, '부산 북구갑' 출마 공식화... 국민의힘 '공천' vs '무공천' 충돌

최수진 '무공천 안돼' 주진우 '당 후보 결정엔 함께'

주호영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김도읍 '무공천해야'

국민의힘이 부산 북구 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한 한동훈 전 대표 본토로 15일 현재 내홍 조짐을 보이는 모양새다. 당내에서 표 본분을 우려한 '무공천' 주장과 공당의 '후보 공천'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제명당한 상태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한동훈 전 대표(때문에) 재이당인 공당이 후보를 내는 건 말이 안 된다"며 "후보 공천은 기본적인 당원들과 국민에 대한 신뢰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에서 "현재 박민식 전 장관에서 출마할 의사를 밝힌 신상환"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에)민중적인 인물이어야 당선될 수 있다"며 "박민식 (예비)후보의 경우 (북구갑 선

거구에서)재선한 경험도 있고 장관 프리미엄도 있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의 전남 "공천을 포기하는 것은 정당의 본분을 잃는 것"이라며 "부산 북구갑에 우리 당 후보를 당당히 공천하고, 그 승리를 위해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부산시장 경선에서 고배를 마신 바 있는 주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위기가 때마다 북구갑을 지켜온 당원동지들의 믿음과 헌신을 존중하고 공명으로서 원칙과 정의를 지켜야 한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원칙을 지켜야 할 미래가 있다"며 "후보를 내고, 당당히 경쟁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것. 그것이 공당의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원칙에 따라 우리 당 후보가 결정되면 저와 당원동지들은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출마 의사를 밝힌 박민식 전 보건처 장관은 "제가 이 선거에 나선 이유는 오직 하나,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이 두 번이나 저를 인양하셨던 북구 주민들의 품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을 위해"라면서 "당일화나 3자 구도나, 제 머릿속엔 없다"고 한 전 대표와의 단결 가능성성을 일축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중앙 정치의 뒷거래나 여의도의 참수 등 소위 뒷거래가 없다면, 애초에 시작도 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 해도 박민식은 멈추지 않는다"며 "멈출 이유도, 멈출 일도 없다"고 결기를 드러냈다.

반면 대구시장 경선 과정에서 지도부와 대립을 세우고 있는 주호영 의원은 "부산 북구갑에 한동훈 무소속(출마 상태에서) 국민의힘이 후보를 내면 민주당이

어부지리라 할 수밖에 없다"며 "철천지 원수도 아닌데 민주당에 의석을 넘기는 것보다는 원 전 대표가 (당선)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주장했다.

전날 오후 JTBC 방송에 출연한 주 의원은 한 전 대표에 대한 측면 지원이 가능하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점에서 지도부가 너를 마음대로 보수 정책에 동요이든 결정은 하길 바란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김도읍 의원은 "민주당도 후보를 내고, 우리 당도 후보를 내서 두 구도가 되면 합치지 않겠다"라며 "법보수 세력인 한동훈 전 대표와 (함께)선거에 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무공천"을 주장했던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의 주장에 힘을 실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동훈 전 대표를 상대로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는 3자 구도가 확실시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쉽게 이기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안 된다"며 "3자 구도에서 당 지도부

가 해야 할 일은 양자 대결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의원의 당 소속 국회의원 대외발언 "부산 국회의원 공석에 우리 당에서 공식으로 누가 가야 한다"는 김도읍 의원의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무공천에 대해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박상훈 수석대변인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무공천은)당당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당원 뜻과 배척되는 결정"이라며 "수경당으로서 (무공천은)안 된다"는 게 국민의힘의 공식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장동태 대표도 언론 인터뷰에서 "우리 당 인사가 아닌 정치인의 공천에 대해 이런저런 얘기 하는 것은 명백한 해당 행위"라며 "부산 북구갑에 후보를 내겠다"고 밝혔다.

조광현 최고위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무공천 주장"은 정적 사교를 위한 수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영한 기자 joy@siminilbo.co.kr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 국제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새 정부 출범 후 첫 번째인 규제개혁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하고 "이를 위해 첨단산업 분야 등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규제 시스템을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에 더해 규제 시스템을 이번엔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 가야 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은 금지해야 하는 사항만을 법이나 규정에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규제가 세운 규제를 계속 주체들로부터 민가를 뜯어내는 '갈취 수단'이 되기도 했다"며 "지금의 구 단계는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지금의 규제는 현상의 필요에 따른 규제의 필요에 의한 측면이 많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과거 산업발전 단계가 낮을 때에는 그 사회에서 가장 통용된 집단인 관료들이 할 자질을 정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공공

이 민간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며 "이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두면 안 된다"면서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어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만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가 나면 어쩌나"라는 생각도 든다"며 "그러나 믿어야 한다.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규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수도권 집중"이라며 "지역에 대규모의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 직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남궁민 전 중소기업 대표 이사, 박용진 전 국회의원, 이병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명예교수에게 축하장을 수여했다.

이 대통령은 "자본이 완전히 들어오는 시기를 갖고 있다. 토론을 통해 (좋은 방향으로)정립해 가자는 게 제 생각"이라며 "열심히 싸우되 대선 역설 잡고 헤어지길 말고, 균형을 이루며 가자"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yy@siminilbo.co.kr

신현송 한은 총재 후보자, 장녀 불법 전입신고·갭투자·증여세 탈루 의혹 논란

신 "이의 추궁 고의성 없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잇따라 터지는 의혹으로 '양과 후보' 별칭을 단 신현송 한은총재 총재 후보자가 이번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장녀를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신 후보자가 갭투자로 매달한 강남 아파트 외에도 종로구 고급 오피스텔과 한일 일리노이 소재 배후자·양녀 명의의 아파트를 보유한 3주택자라는 점 등이 청문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는 모양새다.

개혁신당 전하람 의원은 15일 "신 후보자가 지난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서 자택로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서울 강남구 소재)에 전입 신고했다.

신씨는 신 후보자가 외국인 거주 등록을 해야 하는 A씨를, 옛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내국인으로 가짜로 전입신고하면서 실정법을 위반했다는 점이다.

관련 법에 따르면 '귀화한 자 또는 주민등록증 등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을 금지한 주민등록법 위반 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특히 당시 신 후보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를 A씨 전입 사유로 체크한 점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신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5년 전 결혼해 배우자 독립민 가정을 이룬 상황"이라며 A씨 관련 정보를 숨겼을 의혹은 커진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국회 답변서에는 '합계 거주'라고 했으니, 둘 중 하나는 거짓"이라며 "한국 국적자 혜택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의혹 해소는 위해 건강보험 및 출생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부산 부전시장 방문

부산 부전시장 방문을 두고 민주당 전두환 후보와 국민의힘 비형준 현 시장의 맞대결에 대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민까지 언급하며 "기시경을 넘어"가 들어간 모습이다. 정태 대표는 15일 부산항 국제시진전선센터에서 열린 한동훈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직선은 부산의 중흥을 위한 절호의 기회"라며 "5국 3득의 부산 수석에서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를 완성할 수 있는 찬스가 왔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민주 유혹과 지역 격차 심화로 도시 전체가 계속되고 청년이 떠나고 자조 섞인 말로(부산) '노인만'이라고 한다"며 "이 기시경 이념을 중시하고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부산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부산에도 파란 바람이 불고 있다"며 "파란 바람으로 파란(波濤)을 일으킬 해양수도 부산이 지선 승리 전까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고위 뒤엔 부산전구의 부전시장을 찾아 상인·시민들을 만났다.

이때 따라 당시 해외 채류 중이던 신 후보자 B씨에 지불한 아파트 구매대금 총액은 3억9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신 후보자는 지난 2025년 9월 전세 계약 종료와 함께 전세보증금(3억5000만원)을 B씨에 돌려줬다. 당시 주번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고,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각각 간 갭투자를 통해 11년만에 22억원 가량을 벌인 셈이다. 문제는 B씨가 전세 계약 종료해 해당 아파트에 현재까지 거주 중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부산 거주"의 경우 사실상 중여에

해당돼 증여세 납부 대상이 된다"며 "비거주자 B씨에 지불한 아파트 구매대금 총액은 3억9000만원에 불과했으나 이후 신 후보자는 지난 2025년 9월 전세 계약 종료와 함께 전세보증금(3억5000만원)을 B씨에 돌려줬다. 당시 주번 전세가는 8억원 수준이었고, 같은 아파트 실거래가는 28억6000만원에 달했다. 각각 간 갭투자를 통해 11년만에 22억원 가량을 벌인 셈이다. 문제는 B씨가 전세 계약 종료해 해당 아파트에 현재까지 거주 중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해 권영세 의원은 "부산 거주"의 경우 사실상 중여에

신을 대해 일했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외화 자산을 이미 상당 부분 처분했다"며 "원화로도 다 반한 상태고, 앞으로는 계속 출어 나가겠다"며 "공직자답게 처신하겠다"고 다짐했다. 특히 '모인 아파트 매수' 논란에 대해서는 "투기성이나 갭투자 목적지 아니었다"며 "당시 어머니가 집을 짓기 위해 살았기 때문"이라며 "어머니 생활을 돕기 위해 집을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거주 형태가 증여로 간주된다면 세무 대리인을 통해 필요한 세무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한 기자 joy@siminilbo.co.kr

"美·이란 충돌 세계 가능성... 비상경제 대응"

윤총리, 비상경제본부 회의

김민석 국무총리가 15일 중동 전쟁 상황과 관련해 "미국, 이란 간 무력 충돌이 언제든 재개될 수 있는 위기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본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비상경제 대응 체계는 계속 확고하게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유가 파헤치 지원금 지급 등 '정경 추경'에 원활한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상황"이라며 "장관님들에게 소관 정책 추진의 집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꼭 필요한 분들을 적시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집행 현황을 바로바로 직접 챙겨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또한 "투기성이나 갭투자가 이어 에비엔, 조도발된 등 유수 석유 화학 제품 원료에 대한 매점매식 이 6월 말까지 금지된다"며 "판매 부하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매점매식 행위를 철저히 단속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기업이 정부를 신뢰하고 경제활동을 자재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려면 필요한 품목의 수급 조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대해서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석유 사용이 증가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기업을 보호하고 경제 전반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 세금으로 관련 비용이 일부 충당되고 있고 고유가 장기화를 대비하기 위해서도 에너지 절약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기업과 국민에게도 절연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와 같 실무대응반은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거시경제·물가대응반은 주경에 산 26조2000억원 총 25조원을 집행관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보고했다.

이중 유가 파헤치 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이 필요한 105000억원의 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상반기내 80% 이상 집행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에너지수급관리도 신규국 대상이었던(해당해) 중, 송출비 지역 지원 등을 통해 석유 대체 물량 수급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해나가기로 했다.

또 금융안정반은 이날 해외 국내 증시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증정 협상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 있는 만큼 '신용·실질경제 지원 및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위해 한층 대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영준 기자 dra@siminilbo.co.kr

재민인 생활체육 활성화

문체부, 주경 102억 활용

문체부 재민인 체육 현장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스포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2026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102억원을 활용할 방침이다.

이들은 "국민체육진흥법 15일 이후 2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서 '재민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강화'를 개설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이번 긴급회의에서는 대안재민인체육위원회 최근 시·도 장애인체육회 관계자를 비롯해 60여명 장애인체육 담당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방향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올해 장애인체육 분야 추경 예산에는 ▲장애인 스포츠진흥기용

권 2만명 추가 지원(62억원) ▲장애인 유·청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40억원) 2건이 반영됐다.

특히 장애인 스포츠진흥기용은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대기자들에게 즉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지자체와 연계(국비 70%·지방비 30%)되는 사업 특성에 따라 지자체 지원의 수급에 따라 신속히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다.

또한 장애인 유·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기반 구축 예산이 최초 편성액에 따라 17개 시·도도 장애인 유·청소년 맞춤형 체육 환경을 만든다.

반대(비)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에서 수형, 농구, 배드민턴 등 종목별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이영준 기자 dra@siminilbo.co.kr

조국 '호남·민주당 텃밭 선택은 명분 상실 판단... 與 인사들이 부산 출마 말했다'

지난 14일 경기 광복을 재선거 출마를 선언한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15일 "호남이나 민주당 텃밭을 (출마)선정하면 재가 명분을 잃는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김준우 유 후보에 출마해 이같이 말하며 "민주당 후보와 재가 격렬한 경쟁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에 재선거 귀책 사

유가 있으므로 '무공천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이 광복을 전략공천 방침을 세운 것과 관련해서는 "합법적인 것은 아닌 것 같다. 공당의 대표로서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진보당 김재연 삼민주의와 의 경쟁에 대해서는 "연대를 우대하지만 진보당이 후보를 내면 호남(부산시장)을 체결하고 쏘아 넣는 원칙은 없다"며 "선의의 경쟁

했다"고 밝혔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세는 재계 직접 연락해 '부산은 선택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많이 했다"고 말했다.

이 "민주당에서 부산은 박형준 시장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 '박형준 대진서' 구도가 중심이 되어 왔다"며 "제가 나가면 '조국 대진서'로 구도가 바뀌면서 부산

시장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형준을 정말 그만 둘 것은 부산 출신 사람으로서 같이 이해되더라"라면서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하정우 총재도 시미라기회사 수를 언급하면서 (하 수석)이 나가면 흥분할 이기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dra@siminilbo.co.kr

시장 선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형준을 정말 그만 둘 것은 부산 출신 사람으로서 같이 이해되더라"라면서 "최근 민주당으로부터 출마 권유를 받고 있는 하정우 총재도 시미라기회사 수를 언급하면서 (하 수석)이 나가면 흥분할 이기질 수 있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영준 기자 dra@siminilbo.co.kr